

社會主義國家의 經濟計劃

姜 光 夏*

<目 次>	
I. 사회주의와 경제계획	1. 계획의 실증적 문제
1. 중앙집권적 경제계획	2. 중앙집권적 계획의 수정
2. 계획의 필요성	III. 국제무역 및 외환
3. 계획의 이론적 문제	1. 국제무역
II. 계획 상의 문제점과 수정	2. 환율제도
방향	III. 결 론

I. 사회주의와 경제계획

1. 중앙집권적 경제계획

한 국가의 경제를 하나의 조직체 또는 기구가 담당하여, 무엇을 만들어 내며,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방을 만들어 내는 체제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centrally planned economy)라고 부른다. 이러한 경제체제에서 만들어지는 계획이 중앙집권적 경제계획⁽¹⁾이다.

계획을 만들어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들이다. 따라서 계획의 근본이론은 사회주의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는 소유권과 계층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타난 사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는 목표를, 자본가의 특별한 힘을 중단시켜서 계급없는 사회에로의 길을 터놓는 데 두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윤 동기에 따른 무정부적인 생산에 중지부를 찍고, 모든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고전적 사회주의(맑시즘)는 이러한 원리에 치중하고 일상적인 국가 운영

* 서울대 사회대, 경제학

(1) 이 하에서는 계획이라고 줄여서 사용한다. 별도의 의미를 가질 경우에는 분권적 계획(decentralized planning)과 같이 사용된다.

에 필요한 조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계획을 사회주의의 기본요소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단지 사회주의를 움직이는 데 꼭 필요한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마르크스는 계획을 한 사회의 개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사이에 내재된 모순을 해결하는 시도로서 인식하고 있다. 내재적 모순으로는 사회적 의지의 표현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그것과는 항상 분쟁하는 것 같은 사회 그 자체와의 충돌, 부족한 자원에 대한 획득 경쟁을 포용하고 있는 개인적 결정영역과 보다 높은 동기와 내부적으로 일관된 목적을 가지며 독점적·강제적 권력으로 무장한 공공적 결정영역과의 충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충돌 내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르크스가 그의 자본주의 비판에서 암묵적으로 제시한 본래의 계획에는 생산수단의 사유화 금지 뿐만 아니라 시장, 가격, 화폐의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하나의 조직에 의한 모든 생산과정에 대한 자세한 행정적 통제가 시장, 가격, 화폐 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래 의미의 계획은 시장기구의 완전한 폐지를 의미하며, 생산기술은 더 이상 생물학적, 문화적, 경제적 경쟁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 의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된다. 이런 선택이 하나의 과학적인 계획에 조심스럽게 포함되고, 사회 구성원의 경쟁적 관계가 아닌 협동적인 관계에 의해 수행되어 나가게 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가 증대되고, 효율이 높아지는 경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계획이다.

이리하여 계획은 인간으로 하여금 처음으로 그들의 역사를 그들 손에 의해 만들어 가겠다는 단계에서 나타난 방법이라고 보겠다.

이에 반하여 시장기구는 공동의 목표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며, 공동체의 의지에 호소함이 없이 사회적 전환을 이룩해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생산기술의 선택은 이윤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작성된 계획들의 경쟁에 의해 나타난 계획되지 않은 결과이다.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와 구별하게 만드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공산당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단일정당에 기초한 정부체제이기 때문에 계획이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가치판단도 계

회당국에 의해 이루어진다.

둘째, 생산수단을 사회가 소유하고 있다.⁽²⁾ 대부분의 자연자원과 자본뿐만 아니라 토지, 공장, 은행, 국내외 교역 등이 모두 사회화되어 있다.

세째, 생산수단의 사회화 때문에 계획에 의해 국민경제가 운영되며, 자본가에 의한 착취와 불로소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소득이나 부가 자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진다.

이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결국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이에 따른 계획의 실시가 주 내용을 이루게 되는데, 이런 것이 나타난 배경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있다.

사회주의의 신봉자들은 대체로 자본주의의 결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첫째, 자본주의 체제가 비효율적이며,

둘째,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도입하였으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획을 사용하게 되었다.

2. 계획의 필요성

어떠한 사회구성체도 그것이 존재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개개부문에로의 노동 및 생산자원의 배분이 일정한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균형을 끊임없는 변동과 불균형에 의해 이루어 나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상품의 생산과 분배가 전혀 조작되어 있지 않다. 즉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이 존재하는 셈인데, 이는 모든 자본가가 서로 독립적으로 그들 각자에게 최대 이윤을 가져다 주는 방법으로 생산하며, 그 상품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생각해서 생산하지 않는다.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본질적으로 충돌되는 것이며, 이런 모순 때문에 종종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이 실업이나 공황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불균형을 통해 균형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2)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생산수단의 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때의 사유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와는 다르며, 그 대상도 주택, 내구소비재 등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레닌은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파괴되는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공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또한 불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재화의 생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원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높다. 즉, 각 개인의 이기적 행동 때문에 경제전반적인 조정이 어려워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투입과 산출을 유도할 수 없다. 설령 효율적인 생산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희생이 요구된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 모순이 없다.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성있는 발전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생산수단이 사회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 노동이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는 다수의 기업을 하나의 목적에 복종시킨, 하나의 조직체가 되어있는 국민경제에 통합시키게 된다.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단 한번에 최적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경제를 채택함으로써 자원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대규모의 사회화된 생산이 사회 전체의 행동을 통일시키고, 개개의 산업부문이나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계획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사회적 노동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을 제외하고서는 생각할 수 없지만, 사회주의는 사회적 노동과 자원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계획성있고 균형잡힌 국민경제의 발전을 제외하고는 생각될 수 없다.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생산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국가의 기업경영자는 이윤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장가격에 인도받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대해 지시를 받아야만 한다. 즉, 그들은 명령에 따라서 생산한다.

사회주의체제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계획이 없이는 생산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의 무정부성이나, 공황이나 실업에 종지부를 찍고 경제의 계획성있고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 뿐이다.

대규모의 사회화된 사회주의적 생산은 사회 전체의 행동을 통일시키고 개개의 부문이나 기업의 발전에도, 또한 국민경제 전체에도 필요한 균형을 보장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의한 국민경제의 계획성있고 균형잡힌 발전을 완전하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자재, 자금들을 여러 부문과 여러 기업에 배분하는 올바른 균형을 확립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통하여 중앙계획기구가 만든 회일적 생산계획에 의해 경제를 운영함으로써 균형을 이루하기 때문에 실업이나 공황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결국 불안정하고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 경제를 맡기는 대신 확실하고 안정된 것으로 보이는 ‘보이는 손’, 즉 계획에 경제를 맡기자는 것이 곧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다.

3. 계획의 이론적 문제

오늘날 계획의 옹호자들은 계획의 실패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주의부족, 맞지 않는 사람이 책임을 맡은 점, 통계자료의 부족, 몇 가지 원칙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한 점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집권적 계획이 가지는 두가지 이론적 문제, 즉 지식의 문제(knowledge problem)와 전체주의의 문제(totalitarian problem)와 관련되어 있다.

(1) 전체주의의 문제

경제계획은 그 속성상 정치적·경제적 힘을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경향을 수반하고 있다. 이 기관은 국가의 막대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힘의 집중은 당연히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남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생산수단이 국가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길은 지배계층의 일원이 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지배계층에 속하는 계획입안자들은 지배계층의 힘을 연속시키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되게끔 의사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다.

누가 처음에 의사결정을 하느냐, 또는 그나 그의 고용인이 얼마만치 민주

주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때 일어나기 쉬운 현상이 사람의 비인간화이다. 사회의 최종 단위는 사람이며, 그들을 위해 질서(명령)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관료적 통제는 이러한 경향을 증가시키며, 관리가 국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명령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인간의 생활에는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통용될 수 있는 많은 원리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가지 원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원리들은 필연적으로 상호 모순이 되는 경우가 많다(Trueblood, 1964:13). 예를 들어 도시재개발의 경우 빈민가를 없애는 것도 좋은 원칙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살기를 원할 때 그대로 살게 하는 것도 좋은 원칙이다. 그런데 계획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원리만이 존재하기가 쉽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2) 지식의 문제

계획기구는 사람에 의해 운영될 수 밖에 없으며, 이때 그 사람의 자질이 문제가 된다. 그것은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지식이나 창조력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충분히 필요한 만큼 경제를 자세하게 밑바닥에서 위에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앙계획당국은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에서 자원을 결합시키는 경제적인 기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 지식의 문제이다.

미제스(Mises)에 의하면 과학자나 기술자에 의해 공급되는 단순한 기술적 지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생산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충분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생산의 각 요소가 절대적으로 특정한 것이든가, 또는 모든 요소가 명확한 비율로 완전 대체 가능하다든가 하는 경우에만 선택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상의 두가지 경우가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장에서의 가격의 역할이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질이나 기여도를 모르는 어

면 특정한 제화나 용역의 상대적 희소성을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가격체계는 정보(지식)의 전달수단이다. 가격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는 효율적이다.

가격은 의사결정자가 변화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서도 상대적 희소성의 변동에 대응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변화의 자세한 요약의 역할을 한다.

계획을 옹호하기 위한 모든 제안들의 근본적인 약점은 인간의 지식의 성질에 대해 Polanyi가 말한 그들의 “객관적인(objectivist)”, 또는 Hayek가 말한 “합리적인(rationalistic)” 개념(concept)에 있다(Lavoie, 1985:56).

경제적 의사결정에 합당한 지식은 사회의 단일기관에 의해 충분히 추출되지 않는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계획은 바로 이 분산된 지식의 추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문제는 계획이 사회적 지식을 어느정도 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계획기구는 개인의 지시를 받든 위원회의 지시를 받든, 어느 것이든 그들의 지식에 한정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경우는 그렇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장기구는 계획이 달성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개인의 지식을 경제적·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시장기구에서는 생산과정에 대한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서 공급될 지식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체 경제를 통하여 시장참가자의 누적적 선택에 의해 그들의 지식이 가격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거의 모든 사회적 동물의 경우, 그들은 사회 전체의 지적 능력이 참여하는 개체의 지적 능력을 훨씬 능가하게끔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제도를 연구할 때 제도의 사회적 지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개체의 지성 뿐만 아니라 개체의 상호작용(협력)의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계획은 경제적 조정을 개별적인 의사결정자 상호간의 투쟁, 논쟁에 의하지 않고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은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의 원천에서 접근을 스스로 봉쇄하는 셈이 된다.

결국 사회적 지성(social intelligence)의 추출이 양체계 비교에 관점이 된다.

시장기구가 어떻게 비교적 높은 정도의 사회적 지성에 도달하며, 계획은

왜 시장기구를 본뜨지 못하는가?

문제는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게끔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가 그렇게 하려고 열성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무엇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모르는 데 있다.

Ⅱ. 계획상의 문제점과 수정방향

1. 계획의 실증적 문제

I 장 3절에서는 중앙집권적 계획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계획은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을 정확히 추출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이 실제 계획작성 및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국민경제의 운영방식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앙집권적 계획이 나타난 배경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비효율성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계획이 과연 이 두가지 자본주의 경제의 결점을 해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몇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수행상의 방법 및 문제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1) 계획수립

중앙집권적 계획이라는 것은 생산, 분배, 투자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경제적 과정을 하나의 집중된 권력을 가진 기관이 관리하는 체계이다. 계획의 본질은 경제적 목표의 결정, 계획실현의 방법,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분배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계획은 국민소득의 최적성장 또는 사회적 요구의 최대충족을 달성시키기 위한 경제적 전략의 한 수단이다.

사회주의 이론이 내세우고 있는 순수한 형태의 계획 모형은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다. 그것은 경제운영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으며 정부가 경제생활의 모든 세부적인 건까지 규제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비교적 순수한 형태의 계획이 사용되었던 바, 시장의 기능은 매우 제한되었으며 상당한 정도의 중앙집권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었다.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수립에 대한 전형적인 관계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Kirschen, 1974:303).

- ① 중앙계획 당국에 의한 국가계획의 초안작성
- ② 계획에 포함될 정치적 지침에 대한 당과 정부의 협의
- ③ 계획의 내부적 일관성을 보장해 주는 정책목표의 재작성
- ④ 계획의 부문별 내용에 대한 내각에서의 토의
- ⑤ 부처간의 조정에 따른 목표의 재작성
- ⑥ 기업에게 주어질 목표의 세부적 분할
- ⑦ 기업, 부처, 중앙계획 당국과의 협상에 따른 계획조정
- ⑧ 기업 간의 강제적 조달계약에 대한 결론
- ⑨ 계획기간 시작 이후 어떤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기업은 각료에게 압력을 넣어 목표의 수정을 요구
- ⑩ 각료에 의한 국가계획 및 규제에 대한 수정압력
- ⑪ 정치적 토론과 결정
- ⑫ 목표의 조정
- ⑬ 정부부처에 대한 새로운 목표와 규제
- ⑭ 기업에 대한 새로운 목표와 규제
- ⑮ 기업 간의 강제적 계약에 대한 수정

계획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Brown and Neuberger, 1979:189).

① 사회경제적 재구성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새로운 엘리트그룹이 생기게 되고, 소득분배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 인해 공정하게 된다.

② 투입요소의 동원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인하여 저축과 투자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고용이 증대되고 노동력의 기술수준이 향상된다.

③ 경제성장의 가속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특정분야에의 집중개발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지역간 발전에 균형을 맞추기가 수월하다.

④ 시장불완전성의 제거

외부성을 내부로 끌어들이게 되며, 독과점에 대한 폐해를 줄이고, 기술전

파를 촉진할 수 있다.

(5) 경제적 안정성의 제고

물가 임금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제적 환경변화로부터 국내 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효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는 계획수행 과정에서 큰 효과를 나타낸 것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이와는 달리 계획은 기대하지 않은 결점을 노출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행정의 비효율, 믿을만한 평가기준의 부재, 인센티브의 부재로 인한 미시적 비효율성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집권적 계획체계는 정부가 가장 중요한 목표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 개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력을 촉진시키지 않는다는 등의 제약을 갖는다.

게다가 경제적 여전 변화에 느리게 변화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등으로 인해 1950년대 말경부터 체계가 수정되기 시작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계획 당국의 지침의 강제성을 줄인다.
- ② 계획 당국의 지침의 수를 줄인다.
- ③ 계획의 세분화를 줄인다.
- ④ 생산과 구매에 있어서의 기업의 주도권을 증대시킨다.
- ⑤ 지역의 분권화를 확대시킨다.
- ⑥ 기업의 집중화를 통해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
- ⑦ 시장의 사용을 증대시킨다.
- ⑧ 미시·거시수준의 의사결정의 기초로서 경제적 계산의 사용을 확대시킨다.
- ⑨ 기업의 효율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사용을 확대시킨다.

이상의 몇가지 방향으로 계획의 내용이 바꾸어지게 된 것은 시대적 요청과 사회주의 경제가 갖는 문제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것을 몇가지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2) 자본축적

로빈슨에 의하면 과학적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게끔 자본축적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역사상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개인적 획득방법에 의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계획에 의존하는 것이다(Brus and Kowalik, 1983).

사회주의 계획의 매력은 체계의 동적(dynamic) 요소에 있다.

그것은 저축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저축을 생산적 자본형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 과정은 후진성을 극복하고 고용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제고시키는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다. 후진적일수록 이와같은 다이나미즘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럽의 후진지역인 동구라파의 각국이 계획을 통한 경제성장을 시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잉여(surplus)를 국가의 처분에 맡겨 국가적 발전계획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불로소득의 부재는 노동자로 하여금 소득 획득에 힘쓰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소득의 더 많은 비율을 자본축적에 할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국민소득 중에서 많은 부분을 자본화하여 높은 경제성장과 고용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에서의 투자의 역할은 보다 크고 직접적이다. 그러나 투자율은 예상되는 수요나 이윤의 크기에 근거한 미시적 결정의 산물이 아니고 중앙계획 당국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버린다.

또 투자의 규모는 수요의 부족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데 왜냐하면 수요는 필요수준으로 쉽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투자의 규모가 계획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목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율이 먼저 결정되고, 그 이후에 소득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국민소득의 성장을, 즉 경제성장을 투자의 규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법과 투자에 따른 자본재 활용의 유효성에도 의존한다. 따라서 자본축적에 있어서 효율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효율성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다음의 예로 확실해진다. 기업에 대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의무가 부과되면, 각 기업은 목표달성을 쉽게 이루어 위하여, 가능한 최대의 투자를 요구하고 많은 노동력과 원자재를 청구하고 나아가 낮은 생산목표가 주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로 인해 투자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는 증가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증가율 및 고용증가율이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높았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성향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효율성이 떨어져 기업이 손실을 입게 되거나, 생산을 계속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유인은 항상 과도하게 존재하며, 만약 계원에의 접근이 용이하다면 과잉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에 속하는 엘리트그룹은 고정자산형성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의 미래소비에 대한 현재소비의 선호 경향은 자원 배분에 있어서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맷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맷가를 받는 대상이 국가이든, 개인이든 자본비용에 포함시켜야만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결과이다.

(3) 생 산

생산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 어떤 것을 생산하느냐의 결정이며, 둘째,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이다.

1) 최적생산균형의 도출

생산품목의 결정은 계획에 있어서 사회적 목적함수를 어떻게 도출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즉 생산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의 후생복지의 극대화인데 어떤 재화와 용역을 생산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각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선호를 종합하여 하나의 사회적 선호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개인적 선호를 사회적 선호로 바꾸는 사회적 선택의 기준(social choice rule)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

Arrow의 가능성 정리(Possibility Theorem)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회적 후생함수의 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앞에서 논의한 ‘지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복잡한 문제로 된다. 이처럼 계획단계에서 전체 사회의 복지를 극대로 하는 최적균형을 도출해 내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계획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 기업의 관심을 계획당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두가지 큰 어려움이 있다(Heal, 1973:214).

첫째,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기업이 과연 계획당국에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다. 기업은 계획과정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균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획이 채택하는 균형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계획당국이 설정한 균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인센티브구조가 결정되고 나면 기업은 그 제도하에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해 나갈 것은 자명하다.

이처럼 최적생산에 대한 계획수립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는 생산수단의 자본화한 가치에 대해 개인은 청구할 자격이 없는 관계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업이 부족한 자원을 최고의 가치를 갖는 용도에 사용하게끔 하는 인센티브가 적다. 어떠한 방법으로 최적생산을 위한 자원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분은 현명한 생산결정은 가격정보에 기초하여야만 하고 가격을 완전히 철폐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가격신호를 안다는 것은 필요하다.

계획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격에 나타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경쟁적인 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물질적인 생산요소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그 소유가 분할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생산수단은 모두 공동소유로 될 수 있으며, 기껏해야 최종재(소비재)와 원초적 투입요소(물자 및 노동)가 개별적인 경쟁속에서 자유롭게 교환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처럼 모든 물질적 생산요소를 공동소유로 하는 것은 경제적 지식을 활용하여 이를 수 있는 경제를 제거하는 셈이 된다.

시장경제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를 상당한 정도의 조정과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조정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계획당국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어 몇 사람의 노력에 의해 쉽게 표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로 계획이 가격을 대신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의사를 나타내는 신호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숫자로서의 가격이 시장에 제공하는 유일한 정보라고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가격이 표시된 재화와 용역에 내재된 무언의 의미때문에 가격 스스로가 어떤 지식도 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제한하에 전달되는 지식은 처벌을 회피하는 인간 본성을 반영하며 그러한 가격이 전달하는 지식은 가능한 최적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2) 생산의 효율성

두번째 문제인 생산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어떠한가?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회주의 계획이지만 자본주의의 어떠한 비효율성을 계획이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Marx는 언급이 없었다. 계획된 물량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면 생산에 있어서 자원의 낭비라든가 안팔리는 재화를 생산한다든가 하는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계획에 나타난 생산목표가 시장기구에 의한 균형생산목표와 다를 경우에는 계획달성을 따른 보상은 언제나 효율성(이윤)에 의한 보상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계획은 생산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생산결정에 있어서 이윤동기가 계획에 의한 것보다 났다고 할 수 있다.

생산에 있어서 좋은 성과는 승진, 금전, 권력, 명예 등 어떤 것에 의해서든지 보상되어야만 한다. 계획이 시장경제와 다른 것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에 의한 객관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계획에 의한 경제에 있어서는 승진 등의 보상이 노동자가 소속된 기관의 상급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이 시장경제와 다르다.

그리하여 생산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고조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끔 어떤 방법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 ② 투자은행의 역할이 증대되어 기업별 투자계획의 자율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 ③ 자본재 및 생산공정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기업소유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부담(capital charge)을 국가에 지불함으로써 이자 또는 이윤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 ⑤ 이윤을 기업성과의 지표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잇슈로 등장한 이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4) 인센티브로서의 이윤

이윤(profit)이 기업성과의 주요준거로서 소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1965년이었다(Wilczynski, 1970:49).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소련에 이어 이윤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유고슬라비아만은 소련보다 먼저 1952년에 이미 이윤을 기업성과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범주(category)로서의 이윤 그 자체는 그전부터 별씨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기능은 잉여(surplus)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회계수단이었다.

Liberman과 그의 지지자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성장, 안정, 생산의 질과 효율성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준거는 이윤극대화라고 주장하면서 이윤을 통한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조하였다.

이윤을 기업운영에 있어서 단지 자원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국민경제의 부문별 이윤율수준의 차이는 계획입안자로 하여금 기업운영의 차원이 아닌 거시적인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최적자원분배의 지침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윤은 사회주의경제가 전통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다.

그러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의 도입에도 문제는 많다.

만약 인센티브가 생산량에 기초하여 결정된다면 생산기업은 단순히 생산량에만 신경을 쓸 것이기 때문에 자원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생산액에 기초하여 결정된다면 기업은 가장 비싼 원자재나 부품을 사용하는 재화생산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순생산가치(부가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된다면 기업은 가

능한 한 노동력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실패할 것이다.

한편, 거래에 있어서도 인센티브가 만약 거래액에 기초하여 결정된다면, 거래기업은 값비싼 재화의 공급 및 거래에 주력할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정부는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재화에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단순한 인센티브의 도입은 사회주의가 자랑하는 도덕적 기초, 즉 전체 사회를 위한 개인의 헌신,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찬양 등과 같은 정신적 자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윤을 기업성과 및 효율성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당연히 생산기업에게 지불되는 가격의 합리적 산정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고 가격 설정을 자의적으로 한다면 이윤을 효율성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의 가격은 평균적인 생산비용에 재화의 질과 다른 바람직한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이윤 마진을 더 할 것에 기초한다. 그런데 이윤은 비록 생산량과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생산비용을 낮춤으로써 증가할 수도 있으며 표준품질이 아닌 다양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각기 다른 가격을 매김으로써 차이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한편 물질적 인센티브가 단순히 보다 많은, 보다 나은 일(work)에 대한 화폐적 보상 뿐이라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갖는 효과는 결국 소비자로서의 노동자가 인센티브로 인한 소득증대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화폐적 보상에 보태어 실체적으로 소비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인센티브제도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의 도입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실제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산업별 또는 기업별 이윤의 차이는 종사하는 개인의 소득 차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윤이 효율적인 공장은 더욱 확대시키고 비효율적인 공장은 폐쇄시키는 기준이 되어,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의 발생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별 소득격차나 실업의 발생은 모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동구라파의 최근의 동향은 오히려 노동력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든지 실업은 비효율적인 곳에서 효율적인 곳으로의 노동 이동을 가져오며 그리고 이윤을 개인별로 분배하지 않고 기업단지별 소득기금 또는 투자기금으로 전환시킨다든지 하는 점에서 그리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인센티브제도와 소득불평등 해소, 완전고용의 목표는 상충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윤이 경제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간에 있어서 이윤이라는 명칭이 동일하다는 것과는 달리 몇가지 점에서 상이하다(Wilczynski, 1970:56).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 ① 이윤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 ② 이윤은 생산체한에 의해 증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윤의 결정은 가격설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③ 이윤은 개인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다.
- ④ 이윤은 생산을 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일 뿐이다. 생산은 기본적으로는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며, 생산에 있어서는 이윤에 관계없이 완전 고용을 중시한다.
- ⑤ 이윤은 효율성의 객관적 척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가격설정에 따라 이윤발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 ⑥ 이윤율의 차이가 반드시 투자배분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투자배분은 오히려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⑦ 이윤이 외국으로의 자본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이동에서 는 오히려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이유가 더 중요하다.

(5) 소득분배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된 이유 중에서 소득분배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비소유자간의 소득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는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의 전반적인 공익을 추구하고 분배의 공평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소득분배의 공정을 위해서 사회주의 경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뿐만 아니라 소득획득의 기회의 공평성도 아울러 보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자본주의경제하에서는 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그러한 행동에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저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권리자를 침해하거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국민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려고 한다.

동구라파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총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율은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 때에는 국민소득수준, 소득에서의 투자의 몫, 공공소비의 몫, 그리고 계층간의 소득분배와 사적 소비를 위한 재화와 용역의 양과 가격 등을 고려한다.

한편, 동일기업내에서의 소득결정과 이종기업의 동일 작업에 대한 소득결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본원리는 동일직업에는 동일임금을 적용하며, 임금 수준은 노동의 양과 질에 의존한다.

이러한 원리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된다”라는 사회주의의 이상적인 형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상태에 이르기 전 단계로서 지금까지는 공헌도에 따라 분배된다는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셈인데, “능력에 따라 일하고 공헌도에 따라 분배된다”가 소득분배의 원리가 될 경우에는 모든 사람의 공헌도가 측정되어야 한다. 이때 무엇에 의하여 공헌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 만약 공헌도가 노동 및 재화의 시장에서의 회소성(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방식과 다름이 없다(Haag:1964:19).

만약 그렇지 않고 공헌도가 회소성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 결정된다 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강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분배된다에 있어서도 필요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만약 필요를 결정하는 것이 계획당국의 소수의 엘리트라고 하면, 이것은 과거의 노예제의 경우와 대동소이한 셈이다.

작은 그룹인 경우에는 공동체를 위해 사회의 통제도 받을 수 있지만, 큰 그룹이 되면 그러한 방식은 불가능해진다.

결국 사회주의 경제에서 소득은 아직도 수행한 일의 가치에 의존하고 있

지, 필요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개인별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도입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인 이유로 많은 사회주의 정부는 저임금과 고임금과의 비율에 최고한도를 지정해 놓고 있으며, 동시에 노동과 기술의 일반적 향상을 촉진시키며,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 같은 특정직업 또는 지역에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도록 상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소득분배에는 이와 같은 기본원리에 다음과 같은 것이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계획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달성한 경영자에게,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킨 경영자에게, 특별한 성과를 보인 노동자에게,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업(예를 들어 높은 이윤, 원자재 절약, 생산품의 질향상, 새 상품 생산증대, 수출증대 등)의 모든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보상(보너스 등)을 준다.

유고의 경우, 기업은 내부의 임금지불방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자유를 갖고 있으며(예를 들어 타산업의 동일작업에 대해 2배 정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형가리의 경우에도 동일작업에 대한 동일지불의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자본주의경제에서의 소득분배를 정당화하는 윤리적 원리는 “그와 그가 가진 수단이 생산한 것에 따라”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원리를 현재의 사회주의 소득분배의 원리와 비교해 보면, 근본적인 차이는 생산수단의 소유에 따른 소득발생 여부가 된다. 생산수단의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나쁜 것일까?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에는 개인적 능력의 차이와 자산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과 물려받은 재산의 차이와 획득한 재산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Friedman, 1962:164).

개인적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또는 개인에 의해 축적된 재산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불평등은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물려받은 재산에 의한 소득불평등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에 있어서 공헌도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재산형성이 가능했다고 하였을 때, 이때 형성된 재산에 대한 댓가로서 재산소득이 발생한 것은 과연 나쁜 것일까? 만약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높은 소득에의 유인도 없어질 것이고 나아가 생산의 효율성도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재산축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소득을 소비하여야만 하는데 소비할 대상이 부족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Haag(196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산수단의 소유제한은 보다 큰 권력분배의 불평등을 가져온 반면, 소비의 불평등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소련이 미국보다 소비에 있어서는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소득분배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한 Morrison(1984)에 의하면 경제적 제도의 차이 때문에 다른 나라 사이의 개인별, 또는 가구별 소득을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체코를 제외하면, 동구권 국가들이 소득분배에 있어 서구의 국가들보다 더 균등한 것 같지는 않다. 그 중에서 체코가 가장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나라들은 서구의 선진국과 비슷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 ② 각국에 있어서 소득십분위분배율에 의거, 제 5, 제10분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상대소득은 동구라파와 서구라파가 대동소이하였으며, 반면에 저소득층인 제 1, 2, 3, 4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상대소득은 동구라파에서 높았다.
- ③ 중간계층인 제7, 8분위계층의 경우에는 동구라파가 서구라파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결국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의 경우에는 동구권이 서구에 비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의 경우(9, 10분위)에는 양쪽 진영의 국가들에서 큰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6) 효율성과 윤리성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이 고안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사회체계에서이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Kornai, 1980:148).

- ①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도덕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② 비교—편익에 대한 자세한 계산이 이루어져서 희소자원은 경제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하고 비효율적인 생산활동은 중지되어야 한다.
- ③ 현상황과 외부조건에 대한 빠르고 신축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정책결정자는 그들의 창의력과 혁신하려는 기질, 모험심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 ⑤ 모든 정책결정자는 자기 책임하의 결정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효율성을 달성하려고 노력할 경우에는 사회주의가 이념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원칙과 상호모순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첫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질적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하면, 이 인센티브제도는 모든 사람이 일한 만큼 그의 뜻을 차지해야 하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원리원칙과 마찰을 일으킨다.

만약 기업들이 임금결정에 많은 자율성을 갖고 있어서 보다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수익배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임금에 의해서, 수익성이 낮은 기업보다 많은 지불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똑같은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소득이 크게 다를 수가 있다.

어떤 기업 A가 기업 B보다 수익성이 더 높다고 할 때 이는 기업 A의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일을 잘 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어린 다른 요인에 의해 수익성이 높을 수도 있다. 예를들면 기업 A가 운 좋게도 기업 B보다 더 좋은 기계를 보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만약 생산물의 가격이 모두 중앙계획 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기업 A에게 보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도록 가격이 설정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만약 두 기업이 모두 수출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국제시장 가격이 기업 A에게 보다 유리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소득평준화의 경향이 기업가 정신에 미친 영향 또한 크다. 혁신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성공을 하지 못하면 손실을 보게 되므로 성공에 의해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만이 시도를 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모험의 필요성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작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결국 소득의 평준화는 성과(performance)의 평준화를 가져온다.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지불의 원칙에 충실할수록 인센티브에 의한 고무적 효과는 약해지는 것이다.

둘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과, 일체감과 안전에 관한 사회주의 윤리 원칙과의 충돌을 들 수 있다.

만약 기업이 그가 통제 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어려움에 봉착하였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어려움에 맞부딪히는 것으로서 기업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기업보다 수익이 작게 될 것이다. 이 방법을 택할 때 기업의 목적은 가능한 신축적으로 생산을 실질조건에 맞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정책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목적은 가능한 많은 정부보조금, 조세공제, 저리융자를 통해 도움을 얻는 것이다. 이 방법을 선택 할 경우 기업은 개혁에 의해 부여된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당국의 보호하에 들어가게 된다.

세째, 비용—편익에 대한 계산과 연대의식, 안전성에 대한 사회주의 윤리 원칙과의 충돌을 들 수 있다.

효율성의 두번째 조건은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어떤 활동이 비효율적이라 판정되면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주의 윤리 원칙과 모순된다.

연대의식(solidarity)의 원칙에 의하면 약한 집단이 실패를 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되며 또한 안전(security) 원칙에 의해 사회내의 어떠한 구성원도 실패를 우려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실을 보는 기업은 모두 변제되어야 하며 그 기업에 속한 노동자는 고용이 보장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자기 직업을 끝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경쟁에 의한 적자생존은 일어나지 않는다.

연대의식과 안전은 그 자체로서 대단히 가치가 있다. 치명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되기 때문에 기업의 생명, 기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보다 안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불가피하게 게으르고 쉽게 살려고 하는 경향을 낳게 되며 따라서 효율성의 달성을 어렵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개인(개별기업)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되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의 침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처럼 손실

을 입고 그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변화에의 적응능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2. 중앙집권적 계획의 수정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동구파 사회주의 국가에, 채택된 계획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Balassa & Bertrand(197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계획에 의한 경제운영을 시도한 사회주의 국가의 성장실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 못지 않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그리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유고슬라비아 등의 10개국의 1953~65년간의 성장을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루마니아, 스페인, 유고슬라비아 등이 총요소 생산성에서 가장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정도가 낮은 국가의 성장이 발전정도가 높은 나라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권화된 국가의 경우가 중앙집권적인 국가에 비해 성장률이 1.5% 내지 1% 높게 나타났으며 순요소생산성도 분권화된 국가의 경우가 훨씬 높게 나타나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요소생산성을 유지 내지 증대시키는 데 보다 성공적이었다.

동구파 사회주의국가의 총요소생산성의 상당한 증가는 생산증가보다 빠른 요소투입의 증대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던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운용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체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대략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계획당국자는 소비자의 수요패턴, 기술변화, 자연적 요인 등에 대해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정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훌륭한 계획을 만들 수 없었다.

둘째, 개별기업은 스스로의 생산능력을 알고 있지만, 중앙계획당국은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

셋째, 생산을 담당한 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 의욕적이며 효율적인 노력을 하게 할 동기 부여가 미약했다.

넷째, 체제내부의 관성, 타성 및 관료적 경직성때문에 상황변화에 적응할 유연성이 부족했다.

다섯째, 그동안 성장의 원인이 되었던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가 완전고용 수준에 이르게 되자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여섯째, 내국자본제와 원자재부족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는 바 이하에서는 계획에 대한 수정노력을 국가별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유고슬라비아

종전과 더불어 실시되었던 5개년계획을 통하여 산업화를 시도한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는 계획수행에 있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Bicanic, 1973). 그 이유로는,

첫째, 산업육성에 있어서 경제성보다는 통치권자의 자의적 의도가 더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없었으며,

둘째, 투입원자재의 질의 저하를 들 수 있는데, 계획에 의한 생산지시는 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소련과의 정치적 긴장고조로 인하여 동구파의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교류가 약해졌으며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원조도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넷째, 농업부문의 정체현상을 들 수 있다. 농산물가격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위해 낮은 수준에 머물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잉여가 공업부문에 투자되는 식으로 농업부문은 공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체될 수 밖에 없었다.

유고슬라비아의 개혁은 소련식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체제의 자본가계급 대신에 국가가 지배계급이 되는 국가자본주의에 불과하다고 보고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완성을 목표로 하였다.

1950년 「노동자집단에 의한 정부기업관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분권화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중반까지 계속적으로 분권화를 이룩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제도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미흡하였기 때문에 60년대 후반부터는 기업수입에 대한

세금축소, 투자기금조달을 위한 은행설립, 시장의 자유화, 단일환율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 폴란드

1968년 Gomulka가 당 제1서기가 되었을 때 그는 폴란드 경제의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외국무역을 첫번째로 꼽았다. 따라서 산업재조정 계획은
가장 유익한 수출의 극대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Brada and Montias,
1984).

작은 나라일수록 수출특화산업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 아래 Gomulka는 폴
란드의 투자전략이 수출을 위한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는 체제의 형성보다는
전산업의 발전과 기술수준의 진전 등을 향할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생산성의 급속한 향상은 높은 투자율과 높은 임금인상을 필요로 한다.
이 상호모순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무역에 치중하게 되었
고 동시에 서방세계로부터의 외화차입이 크게 늘어났다. 외자는 주로 서방
세계의 고급기술 도입, 외국기업과의 공동생산, 수입과 수출촉진을 위한 부
문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전반의 성과는 실망적이었다. 많은 수출품이 수익성이 저
하로 인하여 국제시장에서 견뎌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귀중한 원
자재 및 고급소비재의 수입이 제한되게 되었다.

Gomulka의 전략은 또 소비재의 가용성이 증대되고, 노동에 대한 인센티
브제도를 도입하고, 서방으로부터 수입된 선진기술을 이용하는 산업부문에
의 투자증대 등이었다(Kemme and Crane, 1984).

이러한 목적에 필요한 자금은 서방세계의 은행 또는 정부로부터의 차관에
의해 충당되었다.

그는 요소생산성의 증가에 따라 국내경제성장을 높게 유지되는 한편
수출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므로 이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
였다.

이러한 그의 전략은 실질소득과 투자의 급속한 증대를 가져왔는데 이는
비사회주의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에 의해 가능하였다. 그러나 투자의 급속
한 증대는 곧 폴란드 경제의 흡수능력을 능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투자
지연과 자원낭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서방세계로부터의 기계 및 설비도입은 투입요소의 대외의존도를 증가시

키게 하였다.

결국 자본재시장의 불균형증대와 경상수지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경제성장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71년부터 수입에 의한 성장전략을 세운 Gierek는 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New Maneuver”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주내용을 보면 서방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을 낮추고, 수출증가율은 높이고, 투자증가율은 낮추고 명목 임금상승을 통제하고,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자주 변경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결국 성장을 낮추게 하였으며 1979년에는 국민소득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폴란드의 대서방 주요 수출품의 상당수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초과수요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수출증가는 국내생산의 감소와 더불어 국내소비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이리하여 생활수준은 낮아지게 되고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여, 결국에는 solidarity를 결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수입원자재의 감소가 산업생산의 감소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Hanson(1982)은 수입감소에 의해 국민소득이 1978~81년 사이에 24%가 감소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폴란드의 외채는 1978~81년 사이에 통제불능상태에 이르렀고 차관공여자들에 의해 재조정을 받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3)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경제도 성장을 저하, 노동력 소진, 국제경쟁력감퇴로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에 이르렀고 1970년대 초에는 MISC(Most Important Structural Changes) 계획을 채택하여 자본과 노동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었다(Brada and Montias, 1984).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기준으로는 장기적 추세와 생산구조, 연구개발의 상태, 기술적 경영의 표준, 생산의 물질집약도, 생산규모, 그리고 산출단위당 필요투자량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판매, 비교우위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분권화에 따른 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70년대부터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가 다시 채택되어 기업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되고, 고정가격에 의한 총산출가액이 기업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기업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고, 국립은행은 허가받지 않은 투자에 자금대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MISC 계획에 포함된 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충원수당(recruiting allowance)의 지불을 가능케 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보다 CMEA 시장을 생각한 산업정책을 수립하였다.

(4) 항가리

항가리는 초기에서부터 대규모 수출지향 생산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CMEA에 대한 수출가능성, 보다 분명하게는 소련시장의 항가리제품에 대한 증가하는 대규모 수요를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었다(Brada and Montias, 1984).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수직적 통합의 정도가 높은 항가리 기업은 필요한 부품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규모의 경제, 양질의 부품을 생산해 내는 데 실패하였다.

항가리에 있어서 개혁에 대한 최초의 시도는 1954년에 있었지만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변화만 이루어졌다(Kornai, 1980).

그러다가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가열되었으며 자세한 준비과정과 필요한 조치가 수반된 개혁은 1968년 1월 1일을 기하여 시작되었다.

개혁을 하게 된 이유로서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계획에 의한 경제운용은 자원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성장을 둔화시켰기 때문이다.

개혁의 주목적은 공공기업을 관료적 연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데 있었다.

개혁에 의해, 기업은 무엇을 생산하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강제적 지시를 받지 않게 되었으며, 강제적 워타에 의한 투입의 할당제는 거의 중지되었다. 또 상당한 정도 독립적인 기업들이 시장을 통해 연결되어 통제 및 지시의 범위가 축소되었는데 어떤 가격은 여전히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설정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의 합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영역이 상당한 정도 증가되었다.

투자결정에 있어서도 분권화가 진행되어 중앙계획 당국, 은행, 그리고 기업이 꿀고루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의도는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면서 시행되었지만 세계적인 가격폭등 및 항가리에 불리한 교역조건은 개혁에 의한 성장촉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나타내었다(Balassa, 1978).

- ① 생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성장율이 년 6.2%에 달하였다.
- ② 자본산출계수의 향상
- ③ 소비산업 성장률이 5.7%에 이르렀고 소비재의 종류도 다양하게 되었다.
- ④ 요소생산성이 거의 두배로 향상되었으며 오히려 노동력 부족현상을 보일 정도의 완전고용상태를 유지하였다.
- ⑤ 수출의 확대

이러한 결과로 인해 기업의 이윤이 증대되어 인센티브가 생기고, 국내외의 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기술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5) 개혁의 일반적 내용

각국에서 추진된 개혁의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① 계획의 분권화

전보다 덜 명령적이며 덜 자세하며, 광범위한 목표만 설정하며 단기계획에서 장기계획으로, 그리고 물질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변화해갔다.

② 기업의 독립성 증가

계획내용의 수행방법에 있어서 보다 큰 자유가 주어져 생산에 대한 결정, 투자에 대한 결정 등이 기업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③ 이윤의 도입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윤을 기업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인정하게 되었다.

④ 물질적인 센티브 강조

도덕적·비물질적 인센티브보다 물질적 인센티가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기업이윤의 일부가 개인에게도 분배되기 시작하였다.

⑤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신축적인 가격체계가 도입되어 상당수의 재화가격이 중앙계획 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공급상태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⑥ 재무·신용의 역할 증대

이자율, 신용(credit), 세금의 신축적인 사용에 의존하는 정도가 증대되었다.

⑦ 생산과 분배관계의 연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소비자의 기호를 생산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케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⑧ 외국무역 증대

수출증대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체계가 고안되었으며, 특히 수출에 따른 수익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리너(Lerner)와 랑게(Lange)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자들은 사회주의의 결점을 인식하고, 그러나 그 정신만은 그대로 유지한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다.

그들은 시장제도와 계획을 조정하여 경제적·정치적 문제를 풀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시장은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경쟁에 의한 낭비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었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시장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이유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Wilczynski, 1970:42).

① 사회주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거시경제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으며, 미시경제수준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점에서 사회주의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② 계획에 포함된 의사결정의 계속적인 확인과 수정을 위해서이다.

③ 시장이 존재하여야만 생산과 분배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계속적으

로 가장 효율적으로 변해가며, 나아가 구매자시장이 발달할 수 있게 된다.

④ 합리적인 가격체계의 유지를 통하여 생산과 분배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다.

⑤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급속한 기술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그러나 사회주의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한 자본시장과 재정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내재한 완전히 일관성있는 시장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주의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시, 동태적 속성의 우월성이 그러한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기 어렵다.

둘째, 엄격한 예산제 약하의 시장사회주의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재산관계와 양립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즉 위험부담, 재정적 책임, 혁신 등과 관련된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

III. 국제무역 및 외환

1. 국제무역

(1) 무역의 역할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국제무역의 역할에 대하여 시대적인 변천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차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동서양진영으로 확연히 구분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이 세계시장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서구 및 북미경제권에 방사선처럼 연결되어 있었지만 경제력의 상대적 후진성 때문에 그 연결의 정도나 세계경제에서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더불어 양 진영 간의 교류가 단절되자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내의 정치적·경제적 결속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그동안 미약하나마 관계를 맺고 있던 서방측과의 교역을 중지하고 그들 상호간의 교역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제국간의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경제협력체의 형태인 「경제상호원조회의」, 즉 코메콘을 결성하였다.

코메콘⁽³⁾은 가맹국을 주축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사회적 생산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 및 복지의 증진을 기하고 사회주의 체국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어 체제 자체를 하나의 경제 단위로 파악하여 생산의 전문화, 협업화의 확대에 주력하였지만 각국간의 경제력의 심한 불균형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특히 체제내의 선진경제권(소련,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등)과 후진국 경제권(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이해가 상반되어 체제내의 교역에 대한 이탈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점차 대서방 교역의 양이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시기의 사회주의 국가 무역구조의 특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국가간의 생산력 발전의 단계가 달랐기 때문에 체제내의 교역은 수평적 분업이 아닌 수직적 분업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둘째, 역시 시장구조는 다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형이었다.

셋째, 체제내의 교역은 다각적 결제형태가 아니라 두 나라간의 쌍무적 결제형태였는데 그 이유는 국내가격과 교역가격간의 괴리가 심하여 통일된 가격척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제무역은 초기에 있어서는 자급자족 경제체제의 확립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교역이 국가기관 내지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 대행하는 체계이며, 국제적인 가격불안 등의 요인을 국제경제에 전파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이중가격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국내가격은 수입 또는 수출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국내경제정책의 차원에서 결정되었다.

이와는 달리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교역에 대한 요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역이 국가기관에 의해 독점되어 있지 않아서 국제가격이 바로 국내가격으로 접목되

(3) 코메콘은 Communist Economic Conference 또는 Economic Mutual Assistance Council(EMAC)라고 표기하며, 1949년 1월 서방세계의 마샬플랜에 대항하여 소련과 동구체국의 국제경제협력을 내지 국제분업의 중심기구로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가맹국은 소련,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의 6개국이다.

기 때문에 국가는 관세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을 일부 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관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상대국의 관세차별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경제와 세계경제의 관계를 직접 연결시키지 않는 이유로서는 국제무역이 국가의 독립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국제무역이란 자본주의체제로 하여금 자본, 상품, 인구를 해외로 방출할 수 있게 만드는 제국주의적 수단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교역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는 양립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국제무역은 사회주의경제를 자본주의시장 경제의 영향에 노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국제경제의 변동은 중앙계획당국의 통제권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국제경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국제경제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의 정도는 계획의 통제정도가 엄격하면 할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므로 국제경제를 국내경제와 단절시키는 정도는 중앙통제적 기능이 강하면 강 할수록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국제무역의 증대는 아울러 경제의 계획과 통제에 있어서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수입의 증대는 국내생산계획의 일관성을 파괴시키는 큰 교란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제무역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며, 무역부문의 계획도 국내경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함께 작성하고 있다.

(2) 무역계획

국제무역부문의 계획은 국내산업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가장 경제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편성된다. 물론 국내산업계획은 이렇게 만들어진 국제무역부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무역부문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이 국내생산과 국제무역간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계획 당국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국제무역부문을 축소하려고 한다.

(Leeman, 1963:276).

첫째, 정부기업은 그들이 구매하는 투입 요소의 대부분을 국내생산품으로 충당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치적인 압력에 보다 잘 적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둘째, 계획당국으로서는 국제무역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수월하다.

셋째, 국제무역을 통한 재화는 국내생산품에 비해 그 이동의 폭이 좁다. 즉 수출입재화는 몇 개의 주요항구를 통한다든가, 재화가 이동하는 지역 또한 제한되어 있다든가 하기 때문에 국내생산품보다 통제하기가 용이하다.

넷째, 급속한 경제성장에 필요불가결한 투자나 저축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계획입안자에게는 예를 들어, 사치재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더 쉽다.

다섯째, 경제계획은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획당국은 수출증대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적인 통제수단에 의한 수입제한을 통하여 국제수지적자를 시정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더욱 쉽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부문의 계획에 있어서는 수입계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되는데 무역부문에 대한 계획수립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것이 나타났다.

무역부문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먼저 국내산업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여 국내산업계획에서 산정된 필요생산량을 국내에서 다 생산하지 못하는 부문과 국내에서 생산될 수는 있더라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부문을 찾아낸다. 다음에 이렇게 찾아낸 부문의 공급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입계획을 만든다. 그 다음에는 결정된 수입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출이 이루어져야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인가를 검토하여, 어떤 부문에서 국내 수요를 충당시키고 남은 것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수출계획을 작성한다.

그러므로 60년대초까지의 수출계획은 대체로 경제성장에 필요한 수입을 가능케 하는 자금조달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몇 단계에 걸친 계획을 국가 전체에 관해서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입안자들은 불규칙적인 조건이나 특수한 환경 등을 무시하려는 성향을 갖게 되고 변동에 따른 광범위한

재조정을 회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국제무역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교역으로부터 오는 득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어떻든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국내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이며, 국제무역을 국내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고려되어 부차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무역부문 계획에서는 수입이 기본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수출은 수입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서 부차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수입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첫째, 수입은 경제계획의 중요한 목표인 공업화—특히 중공업부문—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해외기술, 원자재 및 기계류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시키는 수단이다.

둘째, 수입은 계획경제에 있어서의 국내공급체계의 단기적인 불균형의 시정수단이다.

산출목표라든가 투입계수 등의 산출부정화에 의한 구조적 공급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재고비축, 자원배분변경, 생산재계획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다.

(3) 무역의 특징 및 문제점

사회주의 국가의 무역은 다음과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Murrell, 1981:355).

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속의 무역이기 때문에 국제시장상황의 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 가격변화에 대처하는 속도가 늦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의 수출패턴은 자본주의국가에 비해 항상 얼마간 뒤떨어져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② 어떤 재화를 수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산비용에 대한 비교가 종종 이루어지지만, 사회주의국가의 국내가격이 자원의 희소성에 입각한 가격과 상이하기 때문에 무역패턴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③ 사회주의 국가의 인센티브제도는 제품 또는 기존시설에 대한 혁신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다. 점진적인 개선, 개혁보다는 혁명적인 변화에 치중하기 때문에 생산과정을 통한 습득(learning by doing)이 중요한 산업의 경우에는 사회주의국가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④ 보너스 지급이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고급제품의 생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질적인 차이가 중요시되는 재화생산에는 사회주의국가가 불리하다.

⑤ 사회주의국가는 판매 및 구입담당기관 사이의 직접적인 협상이나 개인적인 접촉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문이나 판매 후의 서비스가 중요한 제품의 판매에는 부적당하다.

⑥ 국제무역이 국내경제의 조정수단인 관계로 수출품은 국내시장에서 일시적 초과공급상태에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수출품 결정에 앞으로의 수출가능성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⑦ 사회주의국가의 기업은 관리비용의 절감 필요성 때문에 생산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 현상을 나타내는 재화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무역의 전개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으로서는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경제가 자급자족적 경제성장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국제무역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특히 수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때 필요한 추가적인 수입은 대체로 우선순위를 가진 재화이거나, 공급부족 부문에 대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국제수지상의 압박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부문에 대한 수입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수입감소를 가지고 수입증가를 충당하는 방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점차 수출증대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수출품 선정에 있어서는 국내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재화가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재화가 국내적으로는 낮은 우선순위를 수출에 있어서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이중적 순위체계가 형성되게 되다. 따라서 수출경쟁력면에서 살펴볼 때, 국내적으로 낮은 우선순위의 산업은 부족한 투자, 진부한 기술, 장비 등으로 인하여 수출경쟁력이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생산성 또는 낮은 관계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투입요소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유발된다. 그러므로 수출은 수입유발적인 것이 되기 쉽다.

한편 이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재화를 수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우선순위가 낮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입의존

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이 유발되고 유발된 수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출이 증가하여야 하고, 또 다시 수입이 증가하는 과정을 밟게 되어 무역규모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

둘째, 중앙집권적 계획에 따른 무역결정은 효율적인 무역을 이루게 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재화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수입이 금지되고, 따라서 질의 향상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국가들은 공업화에 치중함으로써 공업화에는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새로운 분야 또는 유망 분야의 발전은 거의 이루어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권과의 무역거래에서의 후진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1차산업제품을 수출하고 공업제품을 수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자 낮은 수출경쟁력 때문에 수출이 부진하고, 이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속도가 늦추어졌으며, 그 정도는 높은 수입탄력성으로 인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부진은 다시 수출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세째, 계획수립자들은 무역에서 오는 변동—국제경제의 변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절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무역은 총량과 상품구성, 지역적 분포에 있어서 불안정했으며 이것이 국내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이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사회주의국가의 무역과 자본주의국가의 무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환율결정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2. 환율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의 환율은 국내가격변화와 함께 무역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통제경제하에서의 환율은 통화의 구매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계획경제하에서의 환율결정은 외환을 획득하는 데 따르는 진정한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역으로부터의 이익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교역에 있어서 어느 거래가 더 유리한 것인가를 판정해주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 해외교역으로부터의 득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동구라파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외환에 의한 교환비율 즉 환율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Kirschen, 1974:319).

첫째, 국제무역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국과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소위 실질환율(real rate)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외국으로부터의 개인적 송금이라든가 관광객에 대한 교환비율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환율에 비해 자국화폐가 낮게 평가되어 있다.

둘째, 50년대에는 환율이 단지 국제무역에 대한 통계작성에서 집계를 가능케 하는 특정단위라든가, 외국무역에 관계하는 기업과 중앙은행의 외환담당 부서와의 거래에 필요한 기술적 계정단위로서의 기능만 수행하였다.

따라서 환율은 수입제의 국내 판매가격이나 수출제의 판매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수입품가격은 국산품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으며, 수출품 가격은 국제가격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환율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대체로 구매력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되면 수출업자는 생산자에게 국립은행에 외환을 판매함으로써 획득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하여야 하며, 이 차이는 정부당국의 가격차이 해결을 위한 특별계정에 의해 처리되었고 수입의 경우도 같은 원리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환율의 경제적 효과는 국내, 국외가격이 외생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수입, 지출의 크기만 결정하는 것이 불과하며, 국제무역의 크기는 다른 요인, 예를들어 무역계획, 목표, 경제정책수단 등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셋째, 50년대 말부터 국제무역에 대한 실효수익의 계산이 도입되었는데, 실제로는 수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계산방법은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기본적 목표는 한 단위의 외화를 벌기 위한 국내화폐로 표시한 비용의 측정이었다. 이것이 계수이든 비율이든 국내화폐와 외국화폐와 관계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같은 비율은 국내가격 혹은 수출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수출량이나 수출구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 비율이 여러가지 재화의 수출에 따른 혜택을 비교하여 순위를 매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효율의 기준이 된 셈이다.

이 제도는 수출에 따른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보너스, 즉 경제적 촉진제도

와 더불어 사용되었는데, 보너스제도 역시 수출상품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제도는 국제시장가격의 변동이 국내시장의 가격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만드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서는 수출에 따른 수입이 수출품 생산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나 수출시장에서의 적응력, 가격변화에 따른 조정능력의 부족이라든가, 수입품의 국내판매가격이 국제시장 가격과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시장가격이 국내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수출에 대한 실효수익의 제고에 대해 보너스를 지급한다든가, 수입품의 국내가격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단을 사용한 결과는 시장경제에서의 실제 환율의 도입에 비해서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타국과의 특정거래에서 나오는 수익율을 측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기보다는, 수출에 국한하여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오느냐를 측정하는 테 그친다. 게다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체계적인 관계가 없음으로 인하여 국제적 분업 내지 특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기업들은 해외시장의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었을 때에는 더욱 많은 외환을 할당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들이 지급받을 보너스가 위협받기 때문에 그들은 교역협상을 지연시켜 국내의 공급부족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본래의 계획을 수정토록 하는 편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비추어 환율이 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196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면 이러한 무역과 외환의 문제점을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를 예로 들어 한번 살펴보자(Robinson and Tyson, 1985).

1974~75년의 국제수지적자의 누적때문에 유고슬라비아당국은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급증하는 외환에 대한 수요 때문에 1976~80년간에 걸쳐 사용된 외환할당제는,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단순한 양적인 제한조치로서 수입허가량설정, 특정재화수입 또는 특정수입업

자에 대한 외환허가 할당량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외환 할당을 위한 “고정가격(fix price)” 방법이다. 이 방법의 특징은 비록 국내수요자에게 허용되는 수입량이, 그가 구매하기 원하는 양보다는 작지만, 그에게 허용된 구매량은 국제시장가격, 공정환율, 관세에 의해 결정된 공정가격(official price)에 의해 이루어진다. 물론 수입량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요구물량의 일정비율만 분배된다.

이와 같은 방법이 70~80년 사이에 계속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지만 다른 하나의 방법인 “신축가격(flexible price or premium)” 할당방법의 사용이 1979~80년에 증대되었다.

이 방법의 특징은 외환의 어떤 사용자에게 그가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외환을 초과하는 프레미엄을 지불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1978년 이후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외환보다 더 많은 외환의 사용이 가능한 어떤 기업은, 외환이 부족한 기업과 상담을 벌여 외환 사용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명시적, 암시적으로 공정환율에 어떤 프레미엄이 붙은 비율로 외환이 교환되는 것은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고슬라비아의 복잡한 외환 할당방법은 개별 생산자에게 여유가지 면에서 인센티브를 왜곡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① 렌트추구에의 유인(incentives for rent seeking)

외환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은 외환에 대한 렌트소득의 존재를 가능케 한다. 즉 혜택 받는 수입업자는 고정가격 할당제에서 공정환율에 의해 구입이 허용된 외환에 대해서 암묵적인 렌트를 받는 셈이다.

신축가격 할당제에서는, 공정환율에 의해 외환을 획득할 수 있는 업자는 공정환율에 프레미엄을 붙여 팔 수 있기 때문에 암묵적 렌트를 얻는 셈이다.

그리하여 각 기업은 비시장수단을 동원하여 공정환율에 의한 외환획득을 도모함으로써 렌트추구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렌트추구 행위는 두 가지 면에서 희생을 초래한다. 첫째, 그렇지 않으면 생산에 사용되었음직한 실질 자원을 렌트추구활동에 사용하게끔 만든다. 둘째, 이것은 체계내의 외환의 흐름을 느리게 하고 수입원자재의 흐름을 지연시켜 생산증단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② 수출에 대한 반유인(反誘因)

이러한 제도는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에 역작용을 가져온다. 즉 1976~80

년 동안에는 수출에 의한 수입이 수입대체에 의한 것보다 더 작았기 때문에 수출하기 보다는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 더욱 이익이었다. 또 특정부문에 대한 수입량 할당과 프레미엄은 수입대체를 통한 외환 한 단위의 획득에 따른 비용에 있어 부문간 큰 차이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최종재 국내 생산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초소재 산업 육성이라는 투자우선순위와 어긋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兩 제도*(fix or flexible price)는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게 하고,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수입대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증가시켰으며 외환을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할당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3. 사회주의국가간의 무역

Mendershausen(196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구라파의 소련 위성국들은 비슷한 재화의 경우, 소련에 대한 수출에서 획득하는 것이 자유진영국가에 대한 수출에서 획득하는 것보다 적다고 나타났으며, 반대로 소련의 수출품에 대한 지불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Brada(1985)의 Marrese and Vanous의 책에 대한 서평을 보면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국가간의 교역에 있어서 소련이 상당한 정도 원조를 한 셈이라고 나타나 있다.

동구라파 사회주의국가는 소련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보고 있으며, 비교적 혜택, 즉 군사적·정치적 충성을 그 댓가로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역에 따르는 이익의 크기는 소련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며 이것은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구라파 각국에 대한 소련의 수출품(석유, 원자재)의 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낮은 반면, 소련이 순수입국인 재화(기계, 소비재)의 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높았다.

소련은 서방 각국과의 교역을 포기하고 동구라파 사회주의국가 교역을 함으로써 교역에 따르는 이익을 그만큼 포기한 셈이다. 이것을 그들은 암묵적 원조라고 불렀다.

이상의 두 가지 연구 결과는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국가들 간의 교역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각각의 연구방법상의 문제를 차지하고 생각해 본다면, 어느 쪽이 맞든지 동구라파의 사회주의국가들은 소련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많은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치적인 복종에 대한 댓가로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있든, 교역에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든, 소련 경제가 동구라파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 연구의 결과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때, 동구라파의 사회주의국가들은 소련 경제의 영향권 안에서, 한편으로는 소련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득을 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면서 소련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득실의 방향은 정치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 소련의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편 소련은 동구라파 사회주의제국의 정치, 군사적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로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 동구라파 사회주의국가들을 소련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구라파 각국이 이득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하는 것은 소련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소련과의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得을 보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Brus and Kowalik(1983)의 연구에 의하면 소련은 교역조건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입장에서 得을 보아왔는데, 처음에는 서방국가와의 교역에서, 그리고 차츰 코메콘가맹국들간의 교역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어떻든 동구라파의 5개국(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서독, 헝가리, 루마니아)의 대서방 순채무를 살펴보면 1970년에 대략 1억불정도였는데, 1975년에는 12억불, 1980년에는 30억불로 증가하고 있다. 폴란드의 외채는 1970년에는 거의 없다가 1980년에는 무려 25억불에 이르고 있으며, 유고슬라비아는 5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경제규모와 비교해서 볼 때 외채문제는 거의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국가간의 교역에 있어서 동구제국이 별다른 得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부존자원이 다르고, 기술수준과 공업화의 정도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므로 외채규모를 가지고 得失을 논할 수는 없지만, 동구라파 각국이 그동안 소련과의 교역을 계속하면서도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서방세계와의 교역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은 소련과의 교역에서 별다른 得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IV. 결  론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더불어 동구파와 각국들은 소련식 사회주의 계획방식을 도입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려고 하였다. 초기에는 비교적 사회주의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계획을 만들어 수행해 나갔지만, 점차 그 제도가 갖는 문제점들이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0년대 중반을 고비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산업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자급자족적인 형태의 계획에서 벗어나 기술적으로 진보된 산업의 확장과 세계시장을 상대로, 또는 적어도 같은 사회주의 경제권의 他國에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산업에 투자의 우선권을 두어 수출증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무역에 대한 기본시각이 바뀜에 따라 국제적 분업을 통한 자원 결약, 서구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수출입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변혁을 갖게 된 원인으로는 그동안 무역부문을 국내부문의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으로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따라서 국제수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입 감소에만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련파의 교역만을 통해서 계속적인 성장이 어렵게 되자, 사회주의 각국은 국제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게 되었지만 계획경제가 갖는 외환제도의 이중성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수출은 전통적으로 국내의 초과공급 부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국제경쟁력이 부족하였다. 이런 부문의 수출증대 노력은 생산의 저위 때문에 곧장 수입을 증대시켰고, 이런 사태를 모면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부문을 수출전략부문으로 선택하자 수입의 존도의 높음에 연유하여 수입 유발이 강하게 나타났다.

수출의 증대가 수입을 증대시키고, 외환부족현상을 불러 일으키는 악순환을 가져왔기 때문에 외채증가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렇듯 사회주의 국가들은 초기의 고성장시기를 지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계획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약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무역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소련 위주의 경제협력관계에서 서방세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중요시하게 만들었다.

동구라파 사회주의국가와 소련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소련이 경제적으로 동구에 도움을 주는 대신 정치적, 군사적 복종 등 비경제적인 것을 댓가로 받았으며, 차츰 경제적 도움이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소련이 동구와의 교역에서 得을 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得失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양국간의 생산능력이나 제화의 質 등이 아니라 소련이 교역상대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동구의 사회주의국가들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소련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련경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독자적인 성장을 이루려는 그들의 노력은 다시 서방세계의 경제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국 경쟁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포용하고 있는 국가는 자신의 의지 여하에 불구하고 경쟁력이 강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동구라파의 사회주의국가의 경우에서는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체제가 어떠한 것인든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경제력이 강한 나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종속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체제에서도 존재하며, 종속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강화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政治論」에서 “사람이면 어떤 물건이 자기의 것이라고 느낄 때, 그 기쁨은 해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계획보다는 인간본성에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가 이론적으로 볼 때, 잘만 운영된다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좋은 사람에 의한 통치가 나쁜 사람에 의한 것보다 좋다는 약속과 같다.

소련식 혁명의 잘못은 그것이 나아갈려고 하는 방향 그 자체에 있으며, 미국식 방식의 잘못은 지도자들이 그것이 가리키는 옳은 방향으로 충실히 수행해 나가지 못한 데 있다는 말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사

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参考文献

- Balassa, Bela
 1978 "The Economic Reform in Hungary; Ten Years After,"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11, 245-268.
- Balassa, Bela and Bertrand, Trent J.
 1970 "Growth Performance of Eastern European Economies and Comparable Western European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314-320.
- Bicanic, Rudolf
 1973 *Economic Policy in Socialist Yugoslav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nstein, Morris
 1979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Models and Cases*, Richard D. Irwin Inc.
 4th Edition.
- Brada, Joset C.
 1985 "Soviet Subsidization of Eastern Europe: The Primacy of Economics over Politic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9, No.1 (March): 80-92.
- Brada, Joset C. and John Michael Moutias
 1984 "Industrial Policy in Eastern Europe: A Three-Country Comparis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8, No. 4 (Dec.): 377-419.
- Brown, Alan A. and Egon Neuberger
 1979 "Basic Features of a Centrally Planned Economy,"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Models and Cases*, edited by Morris Bornstein.
- Brus, Włodzimierz and Tadeusz Kowalik
 1983 "Socialism and Development,"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7, (Sept./Dec.):243-255.
- Friedman, Milton
 1962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ag, Ernest Van Den
 1964 "The Planners and the Planned," *Central Planning and Neomercantilism*, edited by Schock and Wiggins, 19-39.
- Hanson, Philip
 1982 "The End of Import-Led Growth? Some Observations on Soviet, Polish, and Hungarian Experience in the 1970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6, 130-147.

- Heal, G.M.
1973 *The Theory of Economic Planning*,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Ch. 2.
- Kemme, David M. and Keith Crane
1984 "The Polish Economic Collapse: Contributing Factors and Economic
Cost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8, No. 1 (March):
25-40.
- Kirschen, E.S.,(ed.)
1974 *Economic Policies Compared West and East*, Vol. 1, General Theory,
North Holland.
- Kornai, Janos
1980 "The Dilemmas of a Socialist Economy: The Hungarian Experie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4, 147-157.
- Lavoie, Dou
1985 *National Economic Planning: What is Left?*,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 Leeman, Wayne A., (ed.)
1963 *Capitalism, Market Socialism and Central Planning*, Houghton Mifflin
Company.
- Mendershausen, Horst
1960 "The Terms of Soviet-Satellite Trade: A Broadened Analysi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2 (May): 152-163.
- Morrisson, Christian
1984 "Income Distribution in East European and Western Countr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8, No. 2 (June): 121-138.
- Murrell, Peter
1981 "An Evaluation of the Success of the Hungarian Economic Reform: An
Analysis Using International Trade Dat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5: 352-366.
- Robinson, Sherman and Tyson, Laura D'andrea
1985 "Foreign Trade, Resource Alloca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in Yugo-
slavia: 1976~1980,"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9, No. 1
(March): 46-70.
- Schoeck, Helmut and Wiggins, James W. (ed.)
1964 *Central Planning and Neomercantilism*, & D. Van Nostrand Company,
Inc. Trueblood, D. Elton 1964, "Logical and Ethical Problems Inherent in
Central Planning," *Central Planning and Neomercantilism*, edited by
Helmut Schoeck and James W. Wiggins, D. Van Nostrand Company,:
Inc. 1-18.

Whitesell, Robert S.

1985 "The Influence of Central Planning on the Economic Slowdown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A Comparative Production Function Analysis," *Economica*, Vol. 52, (May):235-244.

Wilczynski, J.

1970 *The Economics of Socialism*, George Allen & Unwin.